

“유보통합 정책 예산 국고 지원을”

강동화 도의원, 교육부 선도교육청 사업 관련 “올 사업 예산 단 39억, 인력·예산 지자체 등에 전가”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0일 제399회 본회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의 배정과 사업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되며 지난 1월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관련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며 1단계 사업인 선도교육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추진단이 발표한 유보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살펴보면, 2023년도 교육부가 지원 예정인 특별교부금의 총예산액은 39억원 뿐이고 선도교육청의 개념에서 지역 중심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보면 과연 교육부와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현재 지역의 실정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보육·교육을 통합하여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아교육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또한 강 의원은 선도교육청 사업과

며, 지난 30여 년 동안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기관 통합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도사업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이전에 실시한 적이 없는 최초 사업이란 특성으로 인해 공모 주체의 기회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데, 유독 급변 사업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 재원과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재원 투자를 우선한다고 명시하며 사업 구상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까지 지역으

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고, 유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적정 인력지원 계획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3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전서

10일 DO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장인상 슬픔 달래주신 모든 분께 감사”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장인어른 생전 말씀 새기며 살겠다”

최근 장인상으로 급거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10일 장례를 마친 뒤 “장인어른이 생전에 주신 말씀을 새기며, 다시 힘내 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발인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며 “저희들의 슬픔을 달래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다. 허둥거리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는 “장인어른은 참 자애로우신 분이셨다. 겨울에 따듯 물이 나오지 않던 차가에 가면 사위에게 대운 세수



물과 마른 수건을 준비해 주시던 분이셨다. 장인어른은 옛날 분이지만 딸과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셨다”고도 전했다. 이어 “텃 밭 마음 부둥켜 안고 견뎌왔다. 장인어른이 생전에 주신 말씀들 새기며, 다시 힘내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장인인 김운걸 전 교수 상을 치르기 위해 급거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장인상을 치른 뒤 오는 18일까지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국내 체류 기간 정치 활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를 중심으로 모여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던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대응해야”

임승식 도의원, “출산·양육·보육·교육 정책 마련 시급 종합지원체계 마련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을”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10일 제399회 본회의에서 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도의 저출생 및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전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전북지역의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만 1명이었다면 출생아 수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6,912명으로 7,000명 선이 붕괴됐다.

이와 함께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 또한 심각한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청년고용축진법 상 청년층의 경우 4만 5,477명이 유출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고,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은 ‘주의 단계’에서 2021년에는 ‘위험 진입 단계’로 높아졌다.



이러한 심각성을 정부 또한 인지하며 지난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했고, 지자체들에 매년 1조원을 출연해 10년 동안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승식 의원은 “현재 전북도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한계로 대부분이 주민 숙원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지원 사업 및 양육·보육·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지

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출산 지원정책과 함께 도내 모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맡기며, 교육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발굴 및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승식 의원은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 놓여있다”며 “인구소멸 속도가 더 빨라지기 전에 과감한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아이 낳고 키우며, 정착하고 싶은 전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농어촌공 농지임대수탁 기회 40대까지”

김정기 도의원, 개선 촉구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전(全) 세대 농업인의 농지형평성 확보와 한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청년 및 신규 농업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이 아닌 40



대 이상의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어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닿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40·50·60세대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에듀테크 정책 추진, 단계·체계화 전북 교육 발전·혁신 이뤄내자”

김명지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도교육청의 에듀테크 정책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내 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이뤄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제39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밀려오는 디지털 기술을 교육 현장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내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에듀테크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 기술들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놀고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영향은 인류 역사 그 어느 시점에서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들의 미래 세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현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 미래는 디지털이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며, 미래의 교육은 디지털 기술이 학습자들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미래 세대



에게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우리의 교육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병과 세계 경제 위기 등에 더욱더 안정적이고 견딜 수 있는 학습 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교육정책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교육 현장 속 학생들이 등교가 가능하든 불가능하지 않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지 의원은 “비대면 교육을 위해 활발히 사용된 에듀테크의 장점을 실제 대면 수업에 적용해 학생의 수업 집중도·참여도를 높이고 동시에 교사의 수업 계획과 실행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양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국제행사 앞두고 군산공항 임시 폐쇄 하늘길 막혀… 전북 이미지 타격 우려”

양해석 도의원, 5분 발언서 “도, 민간항공사 달래기에만 급급 새만금신공항 예산확보 어려움 발생 소지 대비 전략 대응을”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은 대규모 국제대회 2개의 개최시기와 맞물려 군산공항이 임시 폐쇄에 들어간 데 대해 전북도의 항공 활성화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제399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당장 다음달에는 50개국 1만 명이 참가하는 아태비즈니스 대회가, 연이어 8월에는 세계스카우트캠프대회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데 하늘길이 막혀버리면, 국제대회 파급효과와 경제는 물론 향후 전북의 지역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양 의원에게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0년 동안 전북도는 공항운영의 직접당사자인 미군과 소용할 수 있



는 공식적인 루트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그간 해마다 수억원의 도비 보조금을 쥐어 민간항공사 달래기에만 급급했음은 정작 활주로의 주인인 미군측과의 접촉은 공항공사에게만 맡겨두고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끝으로 양 의원은 “새만금신공항과 같은 시기 개항을 목표로 하면서 정부 여당을 등에 업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TK공항, 제주국제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다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항건설에 나서고 있어 새만금신공항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해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에서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자 국내선도 발려쓰고 있는 항공오지 전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검찰독재 심판·민생정치 실현”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회 등원 첫 일선 “민생 입법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현실로”

지난 4·5 재보궐 선거 전주를 지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0일 국회 등원 첫 일선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생정치 실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무소불위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저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단결과 연대가 필수”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아량은 대통령과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아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누구와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모든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정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현실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 담장 밖에서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진보당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어떤 압도적 승리와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어 전주시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